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추경 예산안 28.9조원 국무회의 의결

-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총 28.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  -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입결손 충당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책대는 17.7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,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.2조원,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.5조원, 중소·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.5조원,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,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.5조원 등이 배정되었음.
- 본 추경 예산안은 1998년 외환위기(13.9조원)보다 두 배 이상의 수준이며, GDP대비 비중도 1.9%로 1998년 1.4%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.
  - 또한 과거 경기침체기 때 사회간접자본(SOC)에 가장 큰 비중을 둔 추경 예산안과는 다르게 서민보호와 일자리 창출, 중소·수출기업 지원이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.
  - 이는 ‘경기를 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서민보호책’이라는 기존의 성장주의적 경제관에서 ‘경기침체기 재정책대책을 서민보호에 집중’하는 분배지향적 경제관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는 평가임.
- 정부는 본 추경 예산으로 성장률이 1.5%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추경과 함께 시행 예정인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책까지 감안하면 2%p까지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함.
  -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당초전망치인 13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소비자물가 역시 2%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함.
  -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55.2만명이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이와 별도로 수출중소기업 지원이나 미래 대비 투자 등 간접고용유발효과도 연간 4~7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전함.

(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(안), 기획재정부, 3/23)